# 민형배, 대전환기획위 출범…통합특별시 밑그림 그린다

## 위원장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부위원장 백승주 교수

## 7개 전문위원회 설치…7일 첫 회의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에 당선된 민형배 당선인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민 당선인은 4일 특별시민들의 선택을 엄숙히 받들어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 청사진을 준비할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체계, 핵심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 차원에서는 더 크고 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의 시작"이라며 "국가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당위성에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백년대계를 가장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민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사회·녹색도시·시민주권' 등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으로, 시정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는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이끌었던 정은승 전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백승주 국립순천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산하에는 기획위원회와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7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됐다.

기획위원회는 김영수 중소기업정책재단 원장이 이끌고, 시민주권위원회는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이 맡아 시민 참여와 자치분권 과제를 다룬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장, 임현택 GIST R&D혁신기획본부장, 정영희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양형정 전남대 AI융합대학 학장이 이끌며, 도시공간위원회는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문화관광위원회는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발행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재정 분야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미래 성장 전략에 무게를 두는 한편, 시민주권과 복지, 문화관광, 도시공간 분야까지 아우르는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함께 전남과 광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과 현장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기획위원회는 위원회 간 업무 조정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활동 기간은 약 한 달로, 종료 시점은 7월 20일이다.

민 당선인은 "특별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이행 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산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정 기구인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다루기 어려운 분야는 별도 특별위원회 형태로 보완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행정혁신과 재정혁신, 해양수산 분야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시정을 준비할 계획이며,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인선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환기획위원회의 활동 거점은 빛가람공동혁신도시로 정해졌다.

민 당선인은 "빛가람공동혁신도시는 전남과 광주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공식 활동을 이곳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026학년도 6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사대부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대법 "5·18 유가족 정신적 손배청구권 유효"

##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 권리행사 사실상 불가능

## 법적 장애 존재 인정…국가 상대 소송 길 열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어려웠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1년 보상금을 받았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유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권리인지 여부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 모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유가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가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법적 장애가 존재했다고 봤다.

따라서 2021년 5월 헌재 결정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가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며 "2021년 제기된 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차관급 '4인 부시장' 도입…4실 7본부 24국 체제 출발

##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 지원 기능은 통합…기획조정실 등 지휘 체계 일원화

## 특별시장 인수위와 협의 2차 조직개편안 신속 추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차관급 4인 부시장이 도입되고, 4실 7본부 24국 체제의 ' 3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재난안전·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이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차관급 4명의 부시장(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며,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해 통합 초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통합추진·자치행정·민주인권·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복지·교통·도시·통합공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전담한다. 또,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문화·체육·관광 기능을,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농수산·환경산림 분야를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본부장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기존 양 시·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등의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조정한다.

이를 통해 중복 보고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정비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강점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배치했다.

이는 통합 초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지침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1·2급 등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4년 한시 설치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통합(1본부장, 2부본부장) 등 체계적인 조직 정비 내용을 포함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꾸려지는 첫 조직과 정원은 출범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기구 운영 체계를 갖춘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 시정 비전, 시민 및 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광주시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 시·도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7월1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실·본부장 일원화를 통해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속히 2차 조직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통합시 초기 운영 안정 기대…권력 독점 우려도

▶1면에서 비민주당 당선인도 83명에 달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의회, 기초단체 운영 과정에서 견제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2명 등 지방의원 27명을 배출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대 권력 구조를 정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다수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청사·본회의장 배치, 예산 편성 등 핵심 현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과 선거구에서 나타난 무소속·야권 후보군의 약진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 민심의 경고이자, 통합 이후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요구로도 해석된다.

전남광주통합을 주도할 민형배 당선인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통합특별시의 문 앞에 섰다"며 "이 새로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지역이 주도하는 압도적 성장의 길을 전남광주가 가장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 15일까지 'AI·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실' 운영기관 모집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실생활 중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AI·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실' 운영기관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해학습자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군 문해교육기관, 복지관, 마을회관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AI(인공지능) 이해·활용, 디지털 미디어 이해·허위정보 구별,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유튜브 영상 촬영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모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강사를 별도로 모집·양성한 후 교육 이수자를 지역별로 매칭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 교재·학습꾸러미를 지원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시·군과 기관으로, 학습자 5인 이상 구성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문해교육 미운영 기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도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시·군 또는 인평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심영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